

# 작문성 기사 작성과 왜곡 보도 막아

## 인용 똑바로 하자

**기**자들은 숙명적으로 남들의 말과 글을 전하는 사람이다. 기자의 목격담을 제외하고는 모든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말과 글에 녹아 있고, 진실도 그 말들에 대한 평가와 저울질을 통해 추구된다. 그런데 전달되는 말이 누구의 것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기자의 생각인지 헷갈리게 기사를 쓴다면 그 기사는 독자들을 오도하거나, 적어도 훌륭한 보도가 될 수는 없다. 인용을 둘러싼 기사작성 관행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사소한 것 같은 이런 폐습들이 사실은 우리 언론의 본질적 약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 익명의 소식통 많아

이런 문제들은 크게 취재원 적시 여부와 방법, 인용부호 사용의 정확성, 그리고 기자들간, 신문사간 상호 기사 인용을 둘러싼 관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익명 소식통의 과다 사용, 심지어 앰바고를 깨는 등의 편의를 위한 취재원 바꿔치기, 인용부호의 남발이나 인용부호 안의 어귀를 기자가 자의적으로 수정하기, 크레딧의 사용과 남의 기사 인용할 때 출처 안 밝히기 등은 모두 언론인으로서 기본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인데도 우리는 이를 당연한 관행으로까지 여기는 것 같다. 하나씩 따져 보자.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 이 소식통 ….” “정부(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 이 관계자는 …” 우리나라 신문들에는 유독 이런 익명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들이 많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이고, 폐쇄적이라서 그렇다는 설명도 가능하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제부에 근무해 본 기자들은 알겠지만, 외국 언론은 이런 종류의 디프 백그라운드 소스(deep background source)를 인용한 기사는 많지 않다. 이런 기사는 상당한 특종인 경우가 많고, 그런 특종은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남발되는 익명 소식통은 우리 기자들의 나쁜 습벽들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임 항  
국민일보 사회부 차장

“

익명 소식통의 과다 사용, 엠바고를 깨기 위한 취재원 바꿔치기,  
인용부호의 남발이나 인용부호 안의 어귀를 자의적으로 수정하기,  
크레딧의 사용과 남의 기사 인용할 때 출처 안 밝히기 등은  
기본 양심에 어긋나는 일인데도 당연한 관행으로까지 여기는 것 같다.

”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무책임한 작문성이나 예단하는 정책기사, 혹은 부처간, 부처내 파워게임에 놀아난 정책예고 기사들에 이런 익명의 소식통이 자주 악용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입안 이전이라도 미리 신문에 서 다룰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럴 때 좀 더 정확하고, 균형잡힌 기사를 쓰려고 한다면 그런 정보를 흘리는 소식통(관리)의 의도를 파악하고, 과연 그의 신분을 익명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 그 정책의 대상 이익집단이나 다른 부처 등의 입장을 더 취재해 종합적으로 사안에 접근해야 하고, 그렇다면 독자들이 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명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 관리는 실명으로 해야

필자가 환경부를 출입할 때 공장지대의 대기오염 총량규제 도입이 산업자원부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고 있었다. 그런 사정을 전달하기 위해 1면톱으로 환경부의 정책방향과 산업자원부의 입장과 한전, 경유 및 석유산업계

쪽 사람들의 말을 종합적으로 전했다. 습관적으로 환경부쪽 관리는 익명, 반대쪽은 실명으로 처리했는데 공정한 것이었는지 반성하게 됐다. 관계자라는 게 어차피 주무국 국·과장일 게 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취재원 보호라는 게 형식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악의는 없더라도 과잉 익명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 발표기사에서도 정책 생산 당국자의 책임감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 정책 목표나 기대되는 효과 등을 설명하는 부분은 해당 관리의 말을 실명으로 인용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실한 취재에 익명 많아

기획기사의 경우 취재가 부실할 때 익명이 많이 나온다. 특히 가정에 따라 결론을 미리 잡아놓고 그 쪽으로 몰고가려고 할 때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이 주로 인용된다. 그럴 때 생각이 부분적으로 다른 소식통의 말에서 기사 흐름과 논리가 다른 부분에서 기자의 의견이 섞이면, 그 소식통은 익명으로 처리되곤 한다. 의견을 말해 준 사람에게 미안한 줄 알기 때문이다. 이는 복잡하

거나 미묘한 사안을 7매 안팎의 짧은 기획기사로 만들 때 기자들이 흔히 부닥치게 되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물론 '배강도가 늘고 있다'거나 '강남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다'처럼 명료하고 분명한 사회, 경제현상을 전달하는 기획기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원인을 분석하거나, 파장을 평가하는 대목에서는 당사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분명히 다른 목소리들이 있을 것이다. 좋은 기사는 나올 수 있는 의견과 분석을 될 수 있는 대로 포괄해서 전달하되 기자와 신문사의 판단에 따라 가중치를 두거나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어떤 분석과 대안이 더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지면이나 기사분량이 모자라거나 정답이 너무 불확실한 사안일 경우 기자의 의견을 될 수 있는 대로 숨길 수도 있다.

최근에 긴 기획기사나 시리즈물에서는 취재원과 (전화)인터뷰 대상자들을 '도움말을 준 사람들'이라는 미니 박스 안에 뭉뚱그려 신고는 본문에서 "어디에 있는 아무개가 말했다."를 될 수 있는대로 생략하는 경우가 일부 신문에서 발견된다. 기사 분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문장흐름의 박력을 위한 것이겠지만,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어떤 기관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했느냐, 아니면 전문가가 아닌 기자의 판단이나를 분명히 구분해줘야 한다. 독자들에게는 누가 그런 의견을 밝혔는 것도 중요한 정보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경기전망과 부양책의 필요성을 둘

러싼 논쟁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역할에 대한 평가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룬 기획 시리즈에서 인용된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준 익명화된다면 미리 짜 둔 결론에 부합되도록 코멘트들을 편파적으로 종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외국 유력 일간지들을 보면 긴 기획기사들에서 풍부하게 제시된 인용문장들을 통해 기사의 밀도를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기사들에서도 실명으로 된 적절한 인용구절이 많을수록 기사를 읽으면서 신뢰가 간다. 그 각각의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문장 하나 하나의 적절성을 보면 그것을 얻기 위해 몇명과 (전화)인터뷰를 해서 그 문장의 몇배에 해당하는 분량의 대화를 나눴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 실명 사용이 자의적 왜곡 막아

취재원의 실명을 사용하고, 인용부호의 위치를 정확하게 사용하면 그 자체가 기사의 자의적 왜곡을 어렵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라고 입을 모았다. 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설혹 다 같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똑 같은 단어와 구절로 이를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코미디 같은 기사가 요즘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와 긴 기획기사의 리드 부분에서는 간접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용하고 싶은 말을 지면사정상 축약하거나, 신문에 적합한 어귀로 바꿀 경우에도 간접화법을 쓰는 것이 좋다. 굳이 현장감을 살리고자 한다면 그대로 인용한 구절에만 부분적으로 인용부호를 달면 된다.

“

전문가들은 “...”라고 입을 모았다. 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설혹 다 같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똑같은 단어와  
구절로 이를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코미디 같은  
기사가 요즘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

인용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지난 92년 대선 때 보도들을 떠올려보면 금방 실감된다. 당시 국내 신문들은 김영삼 후보의 발언과 찾은 말 실수들을 모두 “말이 되게끔” 다 들어서 실어줬다. 몇몇 정치부 기자들은 인용부호 속의 말이 대부분 기자들의 윤색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김 전 대통령의 언어구사 능력에 대해 전해들은 정도의 정보는 갖고 있을지언정 그것을 실감할 수는 없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미국 대선때 부시 후보의 말 실수가 가감없이 전달되고 별도로 기사화됐던 것과 날카롭게 대조된다. 기자들이 인용부호만 정확하게 사용했다라도 유권자들은 김영삼의 언어구사능력에 대해 다른 판단을 했었을 것이다.

### 타사 기사 인용의 에티켓

끝으로 기자들간의 상호인용과 신문사간의 크레딧 사용에 관해서도 한마디 해야겠다. 연합뉴스 기사를 받을 때 크레딧 꼬박꼬박 다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일 것 같은데도 좀처럼 잘 안 지켜진다. 필자도 국제부에서는 이 수칙을 지켰지만, 사회부에서 웬만한 발표 아이টে에 대해 연합뉴스 것을 거의 그대로

로(추가 취재 없이) 실었을 때 ‘서울=연합’ 크레딧을 안 단다. 기자생활의 첫걸음을 연합뉴스통신에서 디뎠던 나는 그럴 때마다 낮이 밝어지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줄 뻔히 알면서 부장들에게 매번 얘기하는 것도 열없는 짓이다. 각 회사차원에서 새로 지침이 정해져야 한다.

마감시간까지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신문의 믿을 만한 기사를 받을 때 그 신문의 실명을 밝히는 것도 안 지켜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약간씩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기사 도용의 유형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외신에서 다른 신문의 분석이나 전문가 인용 부분을 재인용하는 경우다.

국제부 기자가 일일이 출처를 밝혀가면서 해설이나 기획 기사를 쓰려면 기사 거의 전체가 인용으로 점철되기 십상이라는 점을 잘 안다. 물론 발표 사실이나 이미 널리 보도된 정보나 발언은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지만, 외국 신문이나 잡지의 독자적 분석이나 전문가 코멘트를 인용할 때 “뉴욕타임스에서 말했다.”나, 최소한 “한 인터뷰에서” 정도는 넣어줘야 한다. **신방**

# 확인안된 ‘설’ 크게 보도 혼란만 가중

소모성 정치기사를 줄이자

기 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스스로도 한심하고,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나는 정치기사를 잘 읽지 않는다. 한동안은 아예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물론 남의 나라가 아닌 국내 정치기사 얘기다.

그리고 신문으로 치면 1면이나 앞부분의 소위 종합면들도 건성으로 훑듯 지나가기 일쑤다. 이런 ‘못된 버릇’은 나만의 과벽도 아닌 듯,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적지않게 들었다. 눈에 가장 잘 띄라고 앞세워놓은 제목활자 큰 기사들에 대해 기자들조차 불과 얼마 뒤 ‘그게 뭐였더라?’고 멍한 소리를 한다면 분명 어느 쪽인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느 매체라고 할 것도 없이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듣고 있다. 신문지면에도 정치를 혹독하게 질타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는다.

## 기피증의 이유

1면과 종합면 기피증도 정치기사가 그런 면들을 주로 장식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회지만 그런 간판지면들에 실린 얘기들은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거나 앞날을 전망하고, 인생설계를 하는 데 별 보탬이 되지 않았다. 도움은커녕 쓸데없이 아드레날린을 과다 분비케 하고 만사를 헛갈리게 하는 원흉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내 기피증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국언론의 ‘정치과잉’을 지적하는 얘기는 사실 새삼스러울 게 없다. 술한 비판들이 있었다. 세상은 제법 변했는지 요즘엔 야심만만한 나이의 일부 신참기자들조차 정치부를 기피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그럼에도 정치과잉은 여전히 ‘너무나 일상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1면과 종합면의 주인은 역시 아직도 ‘그놈의 정치’다.

일본 도쿄에서 근무하던 2년전 쯤 일정기간치 발행 주요 일본 중앙일간지들 지면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 전문적인 조사는 아니었지만 그때 정치기사가 일본신문

한승동  
한겨레 국제부 차장

“

**안 보면 잊혀지듯 소모성 정치 기사를 확 줄여버리면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판의 해프닝도 줄고,  
요란스런 정치꾼들의 공연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수그러들고,  
강자들의 정치판 투기욕구도 조금은 사그러들지 않을까.**

”

들 1면 머리와 종합면들을 채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일본 정치면은 4면 1개면 정도

대개 4면 1개면 정도가 정치면으로 고정돼 있고 그 면도 정치집단간의 알력이나 타산 등과 얽힌 뒷얘기들, 말하자면 가십성 기사가 비중있게 들어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일본과 한국의 정치사회 상황이 다르고, 또 조사 당시의 정치기상에 따라 전혀 다른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정치기사 취급 정도와 방향이 우리와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3년 근무기간에 줄곧 받았다.

최근의 다나카 마키코 전 외상 경질이나 스즈키 무넌오 자민당 중의원 의원 이권관련 추문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본 언론들 역시 선거나 주요 정치사건, 대중적 관심이 쏠리는 주요인사들 추문에 주목한다. 당연히 평소보다 많은 분량의 기사를 주요지면에 배치한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한국언론의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과 질에서 훨씬 절제돼 있다는 느낌을 준다.

여야 및 정부 당국자들간의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지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등의 국회일정도 예컨대 ‘부실채권처리’ ‘금융대책’ ‘고용대책’ ‘정치자금문제’ ‘광우병대책’ 등 주제별로 요약하되 구체적인 사실전달에 주력한다.

국회 질의응답에서 최소한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현란한 수사와 과장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이 그대로 왕창 지면을 장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걸 생으로 따옴표만 갖다 붙인채 큼직한 제목으로 다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무미건조할 정도로 사실 요약전달에 충실한 쪽이다.

부적절한 언동과 무기력으로 정치권에 대한 대중들의 정치불신을 부채질한 끝에 지난해 봄 조기퇴진한 모리 요시로 전 총리에 대한 일본언론들의 대응도 답답하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신중’ 했다.

내각책임제라는 특성도 우리와는 다르고 갑갑한 정치현실을 보더라도 그쪽 정치나 언론이 우리에게 무슨 전범이 될 수 있겠느냐며 코웃음칠지도 모르겠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대포) 발사시험을 했을 때

나 역사교과서 김정파동 등의 과거사와 관련한 보도에서 드러나는 일본언론의 고질적 문제는 또다른 관점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정치기사를 다루는 그들의 태도는 우리와는 상당히 다르다.

### 정치꾼들의 구린 계산 그대로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옐로 페이지’ 류는 논외로 하고 미국이나 유럽쪽 언론들 중에서 여야당간의 말꼬리잡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들 또는 일방적 주장을 따옴표 붙여 그대로 대문짝만하게 1면이나 정치면, 사회면 머리로 마구 키워올리는 예를 본 적은 없다.

소위 ‘족의원’으로 대표되는 뒷골방의 이권정치 담합정치는 일본 자민당 파벌정치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행태의 폐단은 그 원류를 능가하는데도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은 일본언론의 변화 몸부림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존경은 커녕 도덕적으로든 인격상으로든 도무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정치꾼들의 ‘격노했다’ ‘언짢아했다’ 따위의 영양가없는 구린 계산과 술집회동 뒷얘기들을 왜 시시콜콜 중계방송하듯 전해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왜? ‘세풍’ ‘총풍’ ‘북풍’에 하고많은 그 무슨무슨 ‘게이트’들이 양산한 화려하고 원색적인 수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던가. 어느쪽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이전에 그런 ‘풍’과 ‘게이트’, 그리고 언론세무조사, 대북정책, 조지 부시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또다시 부각된 이른바 남남갈등, 친일과 명단발표 등의 보도를 통해 매체들간에는 매우 어려운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거듭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각 매체가 뽑아올린 주요면 제목들은 그들간의 얼키고 설킨 이해관계를 극명하게 반영했다.

사안에 따라 그토록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제목과 내용들을 전면에 부각시킨 매체들의 세상사 보도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 분석 판단의 정확성을 우리는 과연 어느정도 믿어야 할까.

### 너무 낭비적이고 소모적

나는 어느때부터인가 이 어지러운 보도행태가 어지러운 한국현실의 충실한 반영일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버렸다. 그리고는 어쩌면 어지러운 한국현실이 어지러운 보도행태의 충실한 반영이 아닌가 의심하며 뒤집어 생각하기 시작했다. 천박하고 추악한 사적 욕구를 은폐한채 공공선을 앞세우는 집단의 어지러운 보도행태가 어지러운 한국현실을 끊임없이 창조 내지 확대재생산 해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복잡다단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주장하기엔 보도행태들이 너무 낭비적이고 소모적이며 특정세력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고

“

**일본신문은 대개 4면 1개면 정도가  
정치면으로 고정돼 있고 그 면도 정치집단간의  
알력이나 타산 등과 얽힌 뒷얘기들,  
말하자면 가십성 기사가 비중있게 들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요즘엔 미국관련 보도들에서도 그것을 새삼 재확인하고 있다. 한 사회집단의 특정대상에 대한 관념, 이미지에 언론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없다. 강자들은 언제나 그 사실을 숙지하고 철저히 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정치기사 줄인다면

한국사회에서 기자들은 그런 강자들의 단순한 피고용자 신세를 벗어나 강력한 동맹세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 이미 그렇게 정착돼온 것이 아닐까. 뿌리깊은 학벌, 성 차별, 지역차별, 그리고 민족분단까지가 다름아닌 그런 차별을 통해 최대의 이득을 얻는 그들 엘리트간의 동맹에 의해 유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고 하면 화를 낼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회사와 기자, 그리고

취재대상인 정치꾼들까지 서로 부르고 호응하며, 어느 한쪽이 빠져도 장사가 되지 않는 3위일체의 어울림. 물론 불법 비리행위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

좌우간 그런 의심이 굳어지면서 신통찮지만 한가지 제안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름 아니라 정치기사를 확 줄여버리자는 것이다. 그 부분에서 모두가 한번 담합을 해보자는 것이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가를 따질 능력도 여력도 양심도 없다면 일단 시비거리를 줄여보자는 소박한 생각에서다. 안 보면 잊혀지듯 소모성 정치기사를 확 줄여버리면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판의 해프닝도 줄고, 요란스런 정치꾼들의 공연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수그러들고, 강자들의 정치판 투기욕구도 조금은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리하여 제대로된 정치를 위한 공간이 비로소 자리잡지 않을까. **[김병]**





# 비판적 시각으로 거듭 확인해야

보도자료 받아쓰기 벗어나자

**해** 마다 대입 수능시험을 치르고 난 수험생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지만 올해는 유난히 눈물을 쏟은 수험생이 많았다. 수능시험을 치른 날 취재 겸 안부 겸 수험생이 있는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에서 눈물에 배어나오지 않는 집을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

수능시험이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된 탓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라고 고3 담당 교사들은 말했다. 착잡한 기분이 들었다. 수험생도 아니고 교사도 학부모도 아니었지만 왠지 그들의 실패에 내 탓은 없나 하는 씁쓸함이 좀체 떠나지 않았다.

## 오래 전부터 자아비판 있었지만

교육 분야를 담당하게 된 지난 99년3월 처음 부딪친 게 2002학년도 새 입시제도였다. 교육에 대한 지식이라야 보통 사람 수준을 넘지 못했던 당시로서는 '특기만 있으면 대학 간다' '무시험 대입 전형' 따위의 발표들을 따라잡기에도 허덕댔 판이었다.

그러나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한 고교를 방문했을 때 '무턱댄' 보도의 여파에 아연하고 말았다. 전년도 모의고사 문제지로 1학년들 시험을 치렀더니 평균 30점 이상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름대로 부지런히 새 대입제도의 허점, 학력 저하의 심각성 등을 취재 보도했지만 이미 공부를 외면한 '83년생' 들에겐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올해 수능시험 예상 난이도에 대한 보도 역시 수험생들의 눈물 바다를 바라보는 씁쓸함의 또다른 원인이 됐다. 연초부터 대부분의 신문·방송들은 '상위 50% 평균 77.5±2.5점'이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발표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기자

김재경  
매일신문 사회2부 기자

날고 기는 전문가, 부지런하기 짝이 없는 '게릴라'들이  
전통 포진해 있는 인터넷 신문, 예리하게 날을 세운  
네티즌들의 포화 속에 기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도자료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우선 급한 일이 아닐까.

역시 '난이도는 신도 못 맞춘다'는 교육계 속 설을 늘상 되새기면서도 평가원의 발표에 의존한 기사를 몇 번은 쓴 듯 싶다. 평가원의 예상 난이도는 최근 몇 년 동안 한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기자들의 이같은 받아쓰기 습관에 대한 경계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지난 97년 IMF 사태가 닥쳤을 때는 '앵무새' 보도를 자아비판한 기자도 있지 않았던가? 물론 마감시간에 쫓기고 전문성은 담보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 부나 각종 기관의 보도자료를 짧은 시간에 검증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해당 분야 보도를 책임진 기자로서 주어진 자료를 거듭 확인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려는 노력마저 소홀히 한다면 기자의 존립 기반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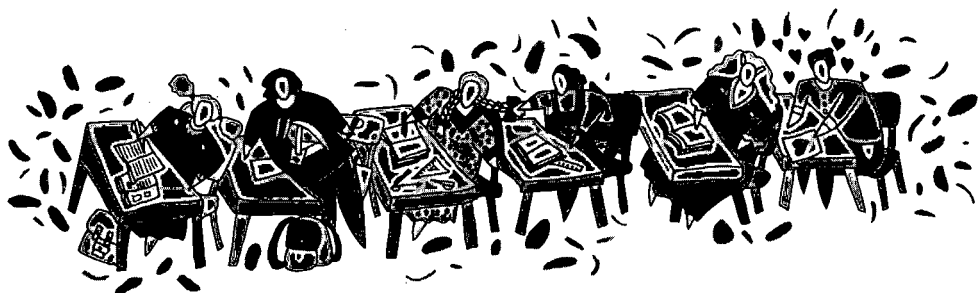
#### 기관 의도가 숨어있게 마련

얼마 전 자료를 눈앞에 읽은 덕분에 "오보한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국 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02학년도 정시 모집 대학 정원 기사였다. 보도자료에는 전국

192개 대학의 정원을 취합했다고 나왔는데 관련 표 말미에 '대구교육대학은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포함되지 않음'이라는 작은 글씨가 보였다.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전화했더니 정원 556명, 정원외 16명으로 확정돼 있다고 알려줬다. 결국 대교협 수치에 이 숫자들을 더해 기사를 마감했다. 그런데 이튿날 조건들은 한결같이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쓴 게 아닌가? 혼자 씩씩히 웃고 있는데, 이를 용케 발견한 편집국의 한 간부가 "왜 숫자가 틀리느냐"고 따져물었다. 해명은 쉽게 됐지만 그다지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그날 오후 기자는 곰곰이 평소 생활을 더듬어봤다. 술이 덜 깬 날이나, 갑작스레 마감할 기사가 쏟아지는 날, 팩스로 이메일로 꾸역꾸역 밀려드는 보도자료들을 마치 속기사처럼 옮겨맨 일들이 떠올랐다. 마감을 끝내고는 '무슨 경천동지할 사안도 아니고, 큰 일이나는 내용도 아니니 대충 베껴쓰면 어때' 하며 자위하던 기억도 적잖았다.



몇 년 전인가 어느 선배와 술자리에서 나  
 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언제나 책상 위에 자  
 료를 뽁뽁이 쌓아두고, 1단으로 처리한 보도  
 자료까지 아무지게 챙기던 선배. "기획 취재  
 도 중요하지만 보도자료를 받아 제대로 쓰는  
 것도 실력이지. 보도자료에는 그 기관의 의도  
 가 숨어있게 마련이거든. 그 의도를 찾아내고  
 다른 측면에서 분석·비판하는 능력을 길러  
 야 보도자료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야. 당  
 장에 안 되면 두고두고 그 기관이 보도자료를  
 낸 사업이나 계획 같은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적하는 것도 기자의 임무지. 그렇지만 보도  
 자료 받아서 획 쓰고 나면 그 뒤에 어떻게 됐  
 는지 따져보는 기자는 드물어".

그리고 나서 그 선배와는 '그때 이후' 라는  
 컷으로 낚은 보도자료 더미를 파 뒤집거나 한  
 동안 묵은 사안들을 들추어내는 연재 기사를  
 쓰기도 했다.

보도자료와 기사 사이의 함수 관계는 기자  
 들이 좀체 풀어내기 힘든 숙제이지만, 기자  
 사회도 점차 전문화를 지향하면서 일방적인  
 받아쓰기 습관은 많이 고친 듯하다. 정부가  
 낸 보도자료를 서로 다르게 읽어내 기사화하  
 는 모습도 흔히 보인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는 게 언론계 안팎의 평가인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 신뢰받는 기사 위해

날고 기는 전문가, 부지런하기 짝이 없는  
 '게릴라' 들이 잔뜩 포진해 있는 인터넷 신문,  
 예리하게 날을 세운 네티즌들의 포화 속에 안  
 그래도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게 오늘날  
 기자들의 현실이다. 기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는, 신뢰받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보도자료  
 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우선 급한 일이 아닐까  
 싶다. **김민**